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소위원회

결 정

사 건 명 14직권-00002 성적을 이유로 한 차별 및 체벌로 인한 인권침해 등
피 해 자 ○○○중학교 1학년 5반 학생들
피 조 사 자 ○○○(○○○중학교 1학년 5반 담임교사)

주 문

1. 전라북도교육감에게,

가. 피조사자가 피해자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신체의 자유, 인격권 및 자치활동의 권리를 침해한 것과 관련하여, 피조사자에 대하여 신분상 처분으로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나. 다른 학교에서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2. ○○○중학교장에게,

학교구성원들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하여, 인권교육을 포함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3 . 2015. 11. 7.(금), 피조사자가 행한 ○○○중학교 1학년 5반 학생들의 좌석배치는, 성적에 의한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유

I. 직권조사 개요

1. 직권조사 실시 배경과 목적

2014. 11. 11.(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이 접수(접수번호:608)되었는데, 그 내용은 ○○○중학교 1학년 5반의 담임교사가 성적에 따라 학생들의 좌석을 배치하고, 학생들에게 체벌을 하며, 해당 학급의 실장과 학생회 임원을 학생들이 선출하게 하지 않고 담임교사가 지정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전라북도 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민원의 내용상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민원의 내용이 다수의 학생들이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라는 점과 민원인이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직권조사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센터는 이 사안에서 성적에 의한 차별이 있었는지,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였는지, 교사가 학생들의 자치 활동을 침해하였는지 등에 대해서 밝힐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학교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직권조사의 방법

센터는 2014. 11. 13.(목) 위 사안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하였고, 같은 해 12. 4.(목), 위 학교 1학년 5반 학생들 및 피조사자에 대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II.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판단

1. 관련규정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2. 당사자(피조사자)의 주장

가. 성적에 의한 차별에 대하여

학생들이 자리를 재배정하기를 원하여 2014. 11. 7.(금), 학급의 자리배정을 위해 각 자리에 번호를 부여한 후, 학생들이 추첨을 하여 자리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 학생과 ○○○ 학생은 학교폭력사안과 관련이 있고, ○○○ 학생이 맹민혁 학생을 때리는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되도록 멀리 떨어진 자리로 배정을 하였다.

○○○ 학생이 한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하였지만, 실장 및 다른 학생들이 다들 반대하여, ‘일단 오른쪽 끝자리에 앉히고 학습태도가 좋아지면 다시 앞으로 앉게 해주겠다’고 하였고, 이렇게 자리를 이동시켜 다시 배정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자리가 조정되어, ○○○, ○○○ 학생을 포함한 15명 정도의 학생이, 추첨으로 배정받은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로 이동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는 성적에 의한 자

리배정이 아니고, 성적에 의해 학생을 차별하지 않았다.

나. 학생 체벌에 대하여

환경부장을 맡고 있어 학교 청소지도를 하고 있는데, 청소지도의 과정에서 청소를 게을리 하는 학생들을 30cm가량의 매(통상적으로 학생들과 피조사자는 ‘엑스칼리버’라고 부름)로 머리를 툭툭 치거나, 꿀밤을 주었다.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청소를 열심히 하고 말썽을 부리지 않아, 상대적으로 남학생들이 주 지도 대상이 되었다.

다. 자치 활동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2013년에 3학년 학급의 담임을 맡아 운영하면서 학급 실장을 투표로 뽑았는데, 학급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학생이 뽑혀 학급의 면학분위기가 엉망이 된 경험이 있어,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하기 위한 본인의 교육적 소신과 판단에 의해, 2014년에는 학급의 실장과 부실장을 임명해서 학급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려 하였다.

3. 인정사실

피조사자의 문답서, 좌석배치표, 성적기록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4. 11. 7.(금), 피조사자는, 위 학교 1학년 5반 학생들의 자리배정을 위해 각 자리에 번호를 부여한 후 학생들의 추첨을 통하여 자리를 선택하도록 하였고, ○○○, ○○○을 포함한 15명의 학생들을

추첨된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로 이동시켰다.

나. 피조사자는,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청소를 게을리 한다는 이유 등으로, 30cm가량의 매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머리를 툭툭 치거나, 꿀밤을 준 사실이 있다.

다. 2014학년도 ○○○중학교 1학년 5반의 1, 2학기 학급 임원(실장, 부실장)은, 담임교사인 피조사자의 지명에 의해 임명되었다.

4. 판단

가. 성적에 의한 차별이 있었는지

「교육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사는 학생을 교육하기 위해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등을 선택할 권한이 있고, 그 선택이 합리적이고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비교육적인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교사가 학생들의 좌석을 배치하는 것은 교육 방법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고, 학생들의 좌석 배치는 학생의 의사, 시력이나 체격 등 신체조건, 교우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2014. 11. 7.(금) 피조사자는, 위 학교 1학년 5반 학생들의 좌석을 배치하기 위하여 번호표 뽑기(추첨) 방식을 사용하였고, 그 추첨 결과

에 따라 좌석을 배치한 후 일부 재배치하였다. 재배치된 좌석의 현황을 살펴보면, 성적에 따라 자리를 배치하여 성적이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앞에 앉고, 성적이 하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뒤에 앉은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교우관계 및 학교폭력 관련자 등의 관계를 고려하여 재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조사자가 좌석을 배치하면서 성적에 의하여 차별을 두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행위는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학생들의 좌석을 배치하는 방법으로 번호표를 뽑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그 결과에 따라 무조건 자리배치를 하면 학생들의 의사, 시력이나 체격 등 신체조건, 교우관계 등을 반영하는데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사전에 어떠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 담임교사가 학생들과 의견을 조율하여 좌석을 재배치하는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후 학생들의 좌석을 배치할 때에는 사전에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따라 조정하여 배치한다면, 성적에 따라 좌석을 배치하였다는 오해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을 침해하였는지

「세계인권선언」 제26조 제2항은,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이하 ‘조례’라 함), 「○○○중학교 학교생활규정」(이하 ‘생활규정’이라 함) 등에 따르면, 학생은 인간으

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존재로서,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우리 사회 구성원이며,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학교에서의 체벌은 신체와 정신에 고통을 가함으로써, 학생의 인격적 존재로서의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고,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여 민주시민 교육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금지된다.

피조사자의 체벌행위가 일상적으로 발생하여, 피조사자를 비롯하여 피해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언제 그 일이 있었는지 날짜를 특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피조사자는 평소 학생지도 과정에서 청소를 게을리 한다는 등의 이유로, 30cm 가량의 매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머리를 톡톡 치거나, 꿀밤을 주는 등의 체벌 행위를 한 것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학생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또한 도구나 손으로 머리를 때리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학생들의 인격권 역시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조사자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학생들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체벌은 폭력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피조사자의 행위가 일상적·반복적으로 행하여졌으며, 위와 같은 행위는 체벌에 대한 낮은 인권감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교육현장에서 더 이상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

다. 학생들의 자치활동의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조례 제18조는 “동아리, 학생회 그 밖에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 학생의 자치활동은 보장”되고, “학교의 장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여야 하며,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는 등의 내용으로 자치활동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의 간섭 없이 자율적인 모임을 통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고, 이러한 참여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운영에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인권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위 규정은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율적인 모임 외에 개인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청원권, 구제신청, 상담요구, 표현의 자유 등에서 별도로 보장하고 있다.

자치활동의 주체가 되는 자치조직은 학생들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하고, 위 학교의 생활규정은 학생들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해 임원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생활규정이 “학급의 임원은 대의원으로서 학생회에 참여”하고, “학급 실장 및 부실장의 임기는 한 학기(6월)를 원칙으로 하고, 재신임을 받을 경우 연임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학급회의 구성에 있어서 실장, 부실장은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조사자가 위 학교 1학년 5반의 2014학년도 1, 2학기

실장, 부실장을 학생들의 선출에 의하지 않고 자신이 지명하여 임명한 것은, 해당 학급 학생들의 자치활동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행위는, 학급 운영을 비롯한 학생 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교육적 소신과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판단은 관련 법령과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고,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III. 결론

피조사자는 일상적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때로 학생들의 머리를 때리는 등의 체벌을 하여, 학생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신체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하였고, 2014학년도 위 학교 1학년 5반의 임원을 학생들이 선출하도록 하지 않고, 자신이 지명하여 임명함으로써 해당 학급 학생들의 자치활동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조사자에 대한 처분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한 이유는, 교사와 학생 등 학교구성원들이 체벌과 자치활동의 권리에 대하여 낮은 인권감수성을 갖고 있는 데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해당 학교는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다른 학교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

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4. 11. 7.(금) 피조사자가 한 위 학교 1학년 5반 학생들의 좌석배치는, 성적에 의한 차별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49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1. 16.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 전 준 형 (서명)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 강 은 옥 (서명)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 임 송 (서명)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 태리명희 (서명)

[별지 : 관련 규정]

가. 「세계인권선언」

제26조

2.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들과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시켜야 한다.

나.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신체의 자유, 자백의 증거능력)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다.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라.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바.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8조(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차별행위의 정의에 해당하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등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교육과정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동아리, 학생회 그 밖에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 학생의 자치활동은 보장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성적, 징계를 받은 사실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며,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④ 학생자치조직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을 제공 받을 권리
2. 학교운영, 학교 규칙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
3. 학생자치조직이 주관하는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권리.

제49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과 조치)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인권옹호관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후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와 교직원에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권옹호관은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1. 제삼자가 한 조사청구에 대해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조사나 상담이 청구될 당시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조사청구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4. 그 밖에 인권옹호관이 상담 및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인권옹호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인권옹호관으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와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인권옹호관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권옹호관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